

남북한과 일본의 3각 협력 구도

남문희 / 시사저널 국제팀 차장

남
북

북정상회담과 일본의 입장에 대해 주로 경제 협력의 관점에서 들여다 보고자 한다. 즉 남북한이 향후 경제 협력을 하고자 할 때 일본은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문제는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총선 기간에 언급한 북한특수론과 관련돼 있다. 그 당시 필자는 김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 특수의 실체에 대해 관심을 가진 바 있고 이 과정에서 일본의 역할이 어떤 형태로든 언급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갖게 됐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북한 특수를 일으킬 만한 자금을 우리 자체의 힘으로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물론 이 점에 대해 필자와 견해를 달리 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다.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최근 국제 SOC 시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스 기법을 활용하면 그리 어렵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필자가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프로젝트 파이낸스 형의 금융 조달은 해당 SOC 프로젝트가 일정한 수익성을 보장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북한의 SOC 프로젝트가 과연 어느 정도

의 수익성을 담보로 할 수 있는지가 의문인 것이다.

필자가 일본의 경협 자금에 대해 주목한 것은 몇몇 일본의 한반도 전문가들과의 토론파장을 통해서였다. 그들과의 토론을 통해 지난 1998년 10월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한일 관계가 대단히 밀접해졌고, 또 이 과정에서 앞으로 북한 진출 시기에 한일간 모종의 협력 문제가 자연스럽게 논의 됐으리라는 판단을 하게 됐다. 물론 이같은 한일 협력은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성격이라기보다는 쌍방향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1998년 10월 김 대통령의 방일 이후 일본측의 희망 사항인 ‘엔의 국제화’, ‘아시아통화 기금(AMF) 구상’ 그리고 최근에 그 연구 결과가 약간씩 공개되고 있는 ‘한일 자유무역 지대에 대한 공동 연구’ 등에 대한 한국측의 협조 또는 적극적인 태도가 전제가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을 전제로 해서 남북한과 일본의 3각 협력 구도에 대해 남북정상회담 합의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남북정상회담 합의 이전 논의돼온 북한 특수에 대한 일본의 경험 참여 구상은 한국 정부나 북한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을 지원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들 수 있다. 일본이 북한을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라 한국을 지원하는 형식이라 해도 일본 여론을 설득하기 위한 명분이 필요한데, 그 명분을 2002년 남북 월드컵 분산 개최로 삼는 구상이다.

정상회담 합의 이전 3각 협력 구상

필자가 북한 특수에 대한 일본의 경험 참여 문제를 조사한 시점은 남북정상회담이 발표되기 직전이었다. 그 당시 일본의 한반도 전문가는 북한 SOC 진출에 대해 한일간에 암묵적으로 논의돼온 구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다.

북한의 SOC 건설 문제에서 일본은 두 가지 방식으로 한국과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첫번째는 북일 수교 이전 단계에서의 협력 방식이다. 북일 수교가 이뤄지기 전에는 일본이 북한에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북일간의 현안인 미사일 문제와 납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자금 지원이 이뤄질 경우 일본 여론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한국 정부나 북한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북한의 SOC 건설에 참여하는 간접적인 방식이다. 이미 한일간에는 이 문제에 대한 협의가 비공개리에 전개돼왔

다고 한다. 그것이 바로 2002년 남북 월드컵 분산 개최 문제이다. 일본이 북한을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라 한국을 지원하는 형식이라 해도 일본 여론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뭔가 명분이 필요한데 월드컵 분산 개최를 그 명분으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월드컵 분산 개최와 북한 SOC 진출

그 경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이 IMF 상황에 빠져들게 되면서 국내 월드컵 경기장 건설 자금이 부족했던 시기가 있었다. 이 때 일본이 미야자와 플랜의 일환으로 주창한 AMF(아시아통화기금) 자금 가운데 일부를 한국의 월드컵 경기장 건설 자금으로 지원하기로 한일간에 뮤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일본이 AMF 자금으로 조성한 금액은 약 300억 달러 규모였고 이 가운데 한국 지원용으로 할당된 것은 약 40억 달러였다. 이 40억 달러 가운데 일부 자금을 당시 일본수출입은행(현 국제협력은행)이 경기장 건설 자금으로 확보해 두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뒤 한국 경제가 살아나면서 이 돈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고, 그러던 중 1998년 박태준 당시 자민련 총재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북한이 월드컵 분산 개최를 수

용할 경우 이 돈을 사용하기로 한 일간에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남북 월드컵 분산 개최 문제는 금년 초까지만 해도 물 건너 간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으나 정상 회담 합의를 전후해 되살아나고 있다. 월드컵 분산 개최는 북한이 월드컵 경기 한, 두 개를 수용하는 차원에 그치는 게 아니다. 경기 기반 시설이 부족한 북한에서 월드컵 경기를 치르려면 숙박 시설, 기존 경기장의 개조 등 막대한 SOC 투자가 필요하다. 이 자금을 우리 기업이나 정부의 힘만으로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AMF 자금은 매우 유용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표면적으로는 월드컵 분산 개최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SOC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선례를 북일 수교 이전 단계에서 만들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선례가 되어 또 다른 SOC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수교 배상금 지급은 ODA 모델 원용

월드컵 분산 개최를 계기로 한 한일 양측의 대북한 SOC 진출이 북일 수교 이전 단계에 추진될 수 있는 방식이다. 이에 비해, 보

월드컵 분산 개최는 표면적으로는 경기 기반 시설이 부족한 북한에 숙박 시설, 기존 경기장의 개조 등 막대한 SOC 투자를 하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SOC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선례를 북일 수교 이전 단계에서 만들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선례가 되어 또 다른 SOC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 본격적인 북한 SOC 건설은 북일 수교가 되고 일본의 배상금이 들어가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수교 자금의 액수에 대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대략 50억 달러 + α 설이 유력하다. 그렇다면 이 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될 것인가. 그동안은 일본의 종합상사나 건설 회사 등이 대북 진출과 관련한 프로젝트를 제출하면 일본과 북한 당국이 협의해 배상 자금으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식이 정설로 언급돼왔다. 다시 말해 일본 종합상사나 건설 회사들이 수교 배상금으로 인해 발생할 북한 특수의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견해가 주류를 이뤘다.

지난 1996년 9월 나진·선봉에서 있었던 국제 투자 설명회에서 일본 도요엔지니어링社가 제출한 ‘나진·선봉 개발 방안’ 이야말로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일본 도쿄 연안의 가시마공단을 모방해 나진·선봉 지역의 우암공업단지를 중화학공업단지로 개발하자는 도요축 구상의 사업 주체는 바로 미쓰이, 미쓰비시, 쓰미토모 등 일본 종합상사들이었던 것이다.

보다 본격적인 북한 SOC 건설은 북일 수교가 되고 일본 배상금이 들어가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SOC 재건 과정에 과거의 방식이 일본 기업 독자 진출 방식이라면, 최근 한일 관계의 우호적 관계 유지, 실리적인 관점에서의 이유 등으로 최근에 나오고 있는 방법은 한일 분업형 또는 컨소시엄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한일간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이와는 약간의 뉘앙스 차이를 느끼게 한다. 과거의 방식이 일본 기업 독자 진출 방안이라면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얘기는 한일 분업형 또는 컨소시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의 선례가 이미 한일간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90년 대 이후 한국 건설 회사와 일본 건설 회사들이 일본 정부의 정부개발원조(ODA) 자금을 가지고 동남아나 제3세계 국가의 SOC 건설에 공동 진출한 사례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일본 회사는 파이낸스 및 설계와 엔지니어링, 그리고 주요 부품 공급 등을 담당하고 한국 건설 회사는 토목 공사를 담당하는 식의 분업형 진출이 이뤄졌다.

이런 선례들이 앞으로 일본 수교 자금의 북한 진출 시점에 적용할 모델로서 최근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 우선 가장 중요한 요인이 한일 관계의 변화라 할 것이다. 김대중 정부 등장 이후 한일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 동아시아 경제 위기 이후 한국의 존재는 그 이

전과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 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할 수 있다. 즉 미국의 경제적 압박에 대한 반감, 그리고 아시아에서 뭔가 기반을 잡고

자 하나 중국이라는 벽이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에 있어서 한국은 일본이 '脫歐入亞'를 하는 데 필수적인 관문이다. 이런 마당에 일본 종합상사가 수교 자금을 독식해 북한을 경제 식민지화할 것이라는 식의 한국내 여론은 일본으로서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었을 것이다.

보다 적극적인 관점에서는 50억 달러 정도를 한국 기업과 쉬어하는 대신 한일자유무역지대 구상이나 엔의 국제화 등의 복안에 대해 한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낼 수 있다면 일본으로서도 크게 손해나는 장사는 아니다.

실리적인 관점에서도 이 문제를 들여다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수교 자금 50억 달러는 유상과 무상으로 나뉘어지는데 무상일 경우는 그렇다 해도 유상으로 들어가는 자금의 변제 문제가 걸린다. 북한만을 믿고 이 자금을 지급할 경우 변제를 기대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이 변제를 보증서는 조건으로 공동 진출을 하게 되면 일본으로서도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1996년 도요엔지니어링

의 개발 구상이 나올 때까지 만 해도 북한 경제 재건의 화두는 북한의 기간 산업체를 회생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 경우 일본 종합상사가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게 가능했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1~2년 사이에는 문제의 초점이 북한의 SOC 재건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기간 산업체 회생 문제와 달리 도로와 철도, 항만 등 SOC 쪽은 일본의 건설 회사 및 건설 인력이 움직여야 하는데 여기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일본 건설 회사들의 고비용 구조도 문제이고 여기에 언어나 문화 습관이 다른 북한의 건설 현장에 일본 건설 회사나 근로자가 진출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북한이 필요로 하는 토목 건설 분야는 이미 한국 건설 회사 쪽으로 경쟁력이 이동해 있다. 따라서 북한의 SOC 재건 과정에 과거 ODA 자금 집행 과정에서 있었던 한일 협력 구도를 모델로 한다는 것은 하등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다.

자금 집행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0억 달러+ α 의 수교 자금 가운데 약 10억 달러는 북한의 식량 농업 문제 등 인도적으로 긴급한 분야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따라서 SOC 건설에는 나머지 40억 달러가 투입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 돈을 북한

북한 경제 재건의 화두는 과거 북한의 기간 산업체 회생에서 최근 북한의 SOC 재건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기간 산업체 회생 문제와 달리 도로와 철도, 항만 등 SOC 쪽은 일본 건설 회사들의 고비용 구조도 문제이고 여기에 언어나 문화 습관이 다른 북한의 건설 현장에 일본 건설 회사나 근로자가 진출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북한의 SOC 재건 과정에 과거 ODA 자금 집행 과정에서 있었던 한일 협력 구도를 모델로 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싱가포르나 홍콩의 은행에 예치해두고 북한이 한국 건설 회사들의 건설 비용으로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이 경우 일본 기업은 ODA 프로젝트에서와 마찬가지로 설계나 엔지니어링을 담당하고 한국 건설 회사들은 토목 공사를 담당하는 식의 분업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방식으로 북한의 SOC 수준이 일단 '경공업 수출공업단지'를 운영할 정도의 수준을 갖추게 된 이후 비로소 일본 종합상사들은 + α 의 자금을 배경으로 북한의 기간 산업 분야에 진출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때 α 는 엔 차관이나 수출 금융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고 북한의 태도에 따라 규모나 방식이 신축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상의 내용이 남북정상회담 합의 이전 물밑에서 논의돼온 북한 특수의 내용이라 할 것이다. 필자가 이를 정상회담 합의 이전이라고 굳이 토를 단 것은 적어도 지난 4월 7일 북한측이 우리측에게 긴급하게 정상회담에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일본이나 미국이 공식적으로 환영의 뜻을 표했으나 내면적으로 불안감 또는 경계감이 있다. 미국은 현재 북한에 대해 핵과 미사일, 테러리즘 문제 그리고 일본은 노동미사일과 일본인 납치 문제 등의 현안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대북 경제 제재 완화, 테러국 해제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경제 지원을 무기로 현안을 해소하고자 했으며, 일본은 대북 수교 자금을 가지고 북의 양보를 받고자 했다.

응할 용의가 있다고 연락해오기 전까지만 해도 남북 관계와 북일 관계는 일종의 함수 관계를 가지고 진행될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적어도 4월 7일의 북한측 통고와 4월 8일의 극적 합의 이전까지만 해도 국내의 많은 전문가들은 총선 이후 남북 관계는 일차적으로는 특사 접촉의 단계를 거쳐 올해 연말쯤에나 정상회담이 가시화되는 방식으로 전개되리라고 예상했었다. 또한 이 과정은 북일 정상화 과정과도 내용적으로 연계가 가능했다. 즉 남북한 특사 접촉을 계기로 북한의 긴급한 SOC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본격적인 SOC 진출은 연말께 남북정상회담과 북일 수교가 동시 타결되고 일본의 배상 자금이 지급되면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됐던 것이다.

그러나 정상회담이 예상을 뒤엎고 급진전하면서 이같은 구상에도 일부 변수 요인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큰 흐름에 있어서는 커다란 차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일본의 반응과 3각 협력 구도

정상회담 발표 이후 그리고 얼마 전 모리 요시로 일본 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필

자는 일본의 한반도 전문가들과 다시 이 문제를 둘러싸고 토론을 벌였다. 몇차례의 인터뷰를 통해 나타난 일본의 입장을 정리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우선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일본이나 미국이나 공식적으로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공식 입장일 뿐이고 내면적으로는 불안감 또는 경계감이 있다. 한국이 너무 앞서감으로 인해 일본이나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협상력이 떨어질지 모른다는 데 대한 우려를 가지게 되었다. 전체적으로는 환영 분위기이지만 소위 협상 전문가들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현재 북한에 대해 핵과 미사일, 테러리즘 문제 그리고 일본은 노동미사일과 일본인 납치 문제 등의 현안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대북 경제 제재 완화, 테러국 해제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경제 지원을 무기로 현안을 해소하고자 했으며, 일본은 대북 수교 자금을 가지고 북의 양보를 받고자 했다.

그런데 남북정상회담과 북에 대한 남측의 경제 지원 문제가 대두할 경우 양측 모두 자

신들의 협상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지 모른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기왕에 정상회담이 합의된 이상 이를 노골적으로 반대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대신에 정상회담에서 김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을 대신해 핵과 미사일 문제 등을 제기해주기를 요구하는 것인데, 어느 정도의 강도로 이 문제를 제기할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도 미국과 일본간에 묘한 입장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미국은 이 문제를 제기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뭔가 주는 것 없이 요구만 하고 있다는 인상인 데 비해 일본은 타협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고 또 요구의 강도에 있어서도 미국보다는 약한 것 같다.

북일 수교 이전에 일본이 직접적으로 북한에 자금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은 불변의 입장이다. 그러나 일본측은 현재 한국측이 이와 관련한 모종의 요구를 해올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를 시작했다. 예를 들어, 한국측이 정부 대 정부 차원에서 북일 수교를 서둘러 줄 것을 요구해올 가능성, 또는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남한에 경제 지원을 요구할 것이고, 이에 따라 북한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이나 은행에 부족한 자금 지원을 요구해올 가능성이

미국과 일본은 정상회담에서 핵과 미사일 문제 등의 제기를 요구하는데, 일본은 요구의 강도에 있어서 미국보다 약한 것 같다. 북일 수교 이전에 일본이 직접적으로 북한에 자금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은 불변의 입장이나 일본측은 현재 한국측이 이와 관련한 모종의 요구를 해올 경우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높다고 보고 대응 방안에 고심하고 있는 것이다. 수교 문제에 있어서는 납치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고는 일본 정부로서도 곤란하기 때문에 자칫 외교적으로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는 것 같다.

또한 기업 차원의 지원에 대해서도 현재 양론이 있기는 하다. 한국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지만 결국 북한을 돋는 것이 되고, 이는 수교 이전에는 일본 돈을 한푼도 줄 수 없다는 기존의 협상 전략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견해도 제시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국을 지원함으로써 북한의 태도를 완화시킬 수 있다면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대두돼 있다. 더구나 한국이 과거 미야자와 플랜에서 약속한 내용을 이행할 것을 요구해오거나 월드컵 분산 개최를 성공리에 이끌기 위해 자금 지원을 요청해올 경우 일본으로서도 뭔가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북한 진출에서 한일간 전략적 협조를 희망

북일 수교 이전 일본의 경제 지원 가능성과 관련해 첫번째 중요한 계기가 바로 5월

북일 수교 이전에는 긴급 인프라와 민간 기업 차원의 진출에 치중하고 본격적인 인프라 진출은 북일 수교 교섭 이후로 미뤄 배상금과 연동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북한측에게도 북일 수교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동기 유발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8~29일 양일간에 있을 한일정상회담이다.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학두는 남북정상회담과 북일 수교 문제에 있어서의 양국간의 협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 경협에 대한 일본의 경협 지원을 요구할 경우 정치가인 모리 총리가 이를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일본측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다.

따라서 일본 내에 일부 우려가 있긴 하지만 북일 수교 이전이라도 한국 정부가 기업 차원에서 대북 경협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요구하게 될 경우 일본은 비록 대규모는 어렵더라도 이에 응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한반도 전문가는 한일간에 전략적 협조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 즉 북일 수교 이전 단계에서는 한국이 북한 SOC에 대한 본격적인 참여보다는 긴급을 요하는 부분에 우선적으로 치중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하게 전력 공급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한 화력 발전소 건설이나 송전선 연결 문제 등 이런 긴급 인프라 지원 과정에서 부족한 자금은 일본측도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북

일 수교 이전에는 이런 긴급 인프라와 민간 기업 차원의 진출에 치중하고 본격적인 인프라 진출은 북일 수교 교섭 이후로 미뤄 배상금과 연동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북한측에게도 북일 수교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동기 유발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김대중 대통령이 아예 남북정상회담 자리에서 북일 수교 교섭에 대한 중재를 해주면 좋겠다는 견해도 나타나고 있다. 현재 북일 수교 교섭의 현안 가운데 하나인 남치 문제는 북한도 일본도 스스로 풀기에는 어려운 지경까지 와 있다. 현재 일본 내부에는 이 문제를 돌파할 외교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조정과 중재의 명수인 김 대통령이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제3의 안(울트라-C)'을 제시해 이 문제를 풀어주면 일본의 행보 역시 매우 가벼워지고 한국에 더욱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견해이다.

과연 한국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가능한지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하튼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가 남북한과 일본의 3각 협력 구도의 폭과 깊이를 좌우하게 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